

학폭 전담조사관 법적 지위 강화해야 성공한다

‘학폭 전담경찰관제’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지위 강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조사관제는 학폭 처리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을 선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 폭력 처리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퇴직 교사·경찰 2700명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
교육청당 15명 사안 경중·발생 장소 상관없이 조사
무분별한 사법 처리 지양... 교육적 방안도 고민해야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점도 적지 않다.

교육감협의회는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시행되지만 교육적인

해결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교육감 협의회는 밝혔다.

예컨대 초등 저학년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리보다 학교장 재량으로 화해·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을 시·도교육청에 배치한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경중이나 발생 장소(학교 안과 밖)를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파·가해학생 간 관

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파·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회원 1300여명이 12일 광주시청 앞 차로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 사립고 재시험 치렀다가 ‘무효’

도교육청 “평가계획서와 다른 출제 비율은 재시험 요건 안돼”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재시험을 치렀지만,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무효처리하고 기존 성적을 반영하기로 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A 사립고교 1학년들은 지난 11일 기말고사 통합과학 과목 3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지난 6일 치러진 통합과학 전체 문제가 기말고사

평가계획서에 따라 선택형 80%, 서술형 20%로 출제되지 않고 서술형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재시험을 치렀다.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휴일 기간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진 것이다.

도 교육청은 11일 상황파악과 함께 재시험 결정

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만, A고교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지난 6일에 치러진 시험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원래 시험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재직 중에만 기준소득월액 정정 사학연금 조치는 형평성 위배”

광주지법, 명퇴 교사 손 들어줘

퇴직 후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공단)의 판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나경)는 퇴직교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준소득월액 변경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983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 판결이 확정돼 파면조치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10월 다시 복직된 뒤 2017년 명예 퇴직을 했다.

A씨는 2018년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성과상여급 지급 소송에서 이겨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한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공단에게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도 변경신청 불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사학연금법을 유추적용해 기준소득월액 정정은 재직 중인가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 연금 가입자간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정당하게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A씨와 같이 퇴직 후 소송을 통해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 후 사정을 고려해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재 위험’ 전기방석·찜질기 등 45개 리콜 명령

화재 위험 등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4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방한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1018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 품목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수거(리콜) 명령을 받았다.

우진테크, 한일전기메트, 대호플러스, 창영테크, 닥터서플라이, 한솔일렉트로닉스 등 6개 회사에서 제조한 전기방석이 기준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로텍메디칼, 프롬비, 두웰플래닛, 비타그랩, 아이룸코리아 등 5개사에서 만든 전기찜질기

또한 같은 이유로 리콜 대상에 올랐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완구나 학습용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아른상사의 유아용 섬유제품은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7배에 달했으며, 주식회사 세주의 어린이 완구에서는 기준치의 14.8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공책에서는 기준치의 42.1배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주식회사 무한의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71.8배를 넘겼다.

해당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